

불확실성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

| 주최 | 헤럴드경제,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
| 일시 | 2010. 12. 7(수) 14:00~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

■ 세미나 프로그램

13:30~14:00

□ 등록

14:00~14:20

□ 개회사 및 기조연설

- 개회사 유 병 창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사장)
김 주 현 (현대경제연구원장)
- 기조연설 손 경 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14:20~15:40

□ 제 1 주제 : 경제시스템 선진화

- * 좌 장 :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 (1) 월별 세미나 요약 보고(현대경제연구원)
- (2) 주제 토론
- 새로운 경제철학/자본주의시스템
좌승희 (서울대 교수)
 - 성장잠재력제고를 위한 과제
이제민 (연세대 교수)
 -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
김태준 (금융연구원 원장)
 -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녹색산업 육성
송병준 (KIET 원장)

15:40~15:50

□ 휴 식

15:50~17:10

□ 제 2 주제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 * 좌 장 :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 (1) 월별 세미나 요약 보고(현대경제연구원)
- (2) 주제 토론
- 양극화와 갈등 해소/사회통합:
이원덕 (사회통합위 계층분과 위원장)
 - 인적자원 역할 제고/교육 및 과학기술 혁신:
정 윤 (KAIST 초빙교수)
 - 고용창출형 복지를 위한 과제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투명성 제고/신뢰/사회적 자본
류석춘 (연세대 교수)

17:10~17:30

□ 종합 마무리

목 차

■ 개회사	7
■ 대토론회 : 불확실성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	
-제1주제 : 경제시스템 선진화	11
-제2주제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33
<별첨>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 세미나 자료 ...	55
■ 월례 세미나 참여 인사	57
■ 제1차 세미나 : 선진 통상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	61
■ 제2차 세미나 : 내·외수 균형성장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93
■ 제3차 세미나 :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126
■ 제4차 세미나 :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통일경제 시대의 준비 ·	161
■ 제5차 세미나 : 저성장 시대 인적자원의 역할 제고 방안	180
■ 제6차 세미나 : 성장친화적 복지 구현을 위한 과제	206
■ 제7차 세미나 : 동반성장 모델의 정립을 위한 과제	244
■ 제8차 세미나 : 녹색산업의 新성장동력화	272
■ 제9차 세미나 : 새로운 시스템·거버넌스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 ...	301

■ 개회사

■ 개 회 사

바쁘신 와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2011년이 일본의 쓰나미,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세계경제가 살얼음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유행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용어가 다시 생각납니다.

국내외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경제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 인적 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외풍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2012년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동안 헤럴드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은 매달 한차례씩 學界, 研究界, 官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진로와 과제를 모색하는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오늘 공개세미나는 지난 9개월간 심도 있게 논의한 과제를 토대로 하여 '불확실성시대 한국경제의 진로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각 분야별로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 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사회자, 토론자로 모신 분들은 그야말로 이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9개월 동안 저희 현대경제연구원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진로를 함께 고민했고 오늘 이 같이 뜻 깊은 행사를 함께 주관해주신 헤럴드미디어 유병창 사장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불확실한 미래 앞에 놓인 한국경제 호에게 제대로 된 좌표와 향로를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제 1 주제 :

경제시스템 선진화

좌 장 : 현 정 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종합토론 : 좌 승 희 (서울대 교수)

이 제 민 (연세대 교수)

김 태 준 (금융연구원 원장)

송 병 준 (산업연구원 원장)

■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과 양극화문제

좌 승 희 서울대 교수

I.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

1. 농업경제(Agrarian economy)에서 기업경제(Corporate economy)로

자본주의 경제는 인류의 대다수가 임금근로자로서 삶의 터전을 땅이 아니라 기업에서 찾는 독특한 경제체제이다. 선진국일수록 국부창출에서 농업의 비중은 한자리수, 심지어 1-2%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것마저도 기업형 농업이 주를 이루면서 기업조직이 없이 경제의 부가가치창출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기업과 분리되면 빈곤층의 나락으로, 좋은 일자리를 잡으면 중산층, 상류층으로 신분상승을 이루게 된다. 일자리를 통해 부의 창출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신분과 계층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 없이 발전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Market economy)가 아니라 “기업경제”라 불러야 옳다.

우리의 삶의 수준과 질의 향상은 바로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자본주의 경제의 제일의 복지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능력에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병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임금근로사회의 만병은 실업에서 오는 것이다.

2. 선형경제에서 비선형 복잡경제로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10개의 마차경제에서 100개의 마차경제로 생산성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마차경제에서 기차, 비행기경제, 더 나아가 우주선경제로 복잡경제가 비선형적으로 창발(emergence)하는 과정이다. 역사 또한 이를 웅변하고 있다. 창발적 발전은 칼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이나 혹은 상호작용이 배제된 시장의 원자적 완전경쟁 속에서는 불가능한 현상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창발적 발전은 네트워크화 된 주체들 간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되

는 시너지의 공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업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는 시너지를 공유하는 경제주체들, 즉 개인 간, 기업 간, 개인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 경제이다. 그래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흥한다는 명제를 피할 수 없다. 네트워크를 통해 끝없이 발전의 노하우가 서로 공유되어 퍼져나간다. 내주위에 나보다 흥하는 이웃이 많을수록 나의 성공가능성은 커지며, 역으로 성공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흥하는 이웃이 없이 내가 성공할 길은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네트워크 자본주의 경제는 칼 마르크스적인 계급투쟁과 착취의 장이 아니라 성공노하우의 공유를 통한 동반발전의 장이다. 칼 마르크스는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하였다. 이는 세상의 참 이치를 거꾸로 본 셈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은 경제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경제주체를 골라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장치이다. 시장은 흥하는 이웃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모두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부여 함으로써 발전을 이끌어낸다. 시장은 경제적 차등과 차별을 통해 모두를 일으키고 발전의 길에 나서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흥하는 이웃의 성공노하우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서로 무임승차를 통해 퍼져나간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본질상 성공노하우를 서로 무임승차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모두를 경제적으로 같게 만들지는 않는다. 경제적 차등은 자본주의 경제가 초래하는 약점이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 없이 발전은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차등 없이 경제적 동기부여와 발전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II. 양극화의 본질

1. 동반성장이 안된다는 양극화 현상은 인재(人災)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실제 동반성장효과가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차이는 바로 그 사회의 경제제도나 정책이 경제주체들끼리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의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동반성장을 막아 소위 양극화를 조장하는 경우는, 우선 흥하는 이웃의 등장을 원활히 도와주지 않아 아예 수원지가 고갈되거나, 혹은 수원지에 땀을 쌓아 수문을 닫아놓거나, 아니면 물이 넘쳐흐르지만 손수 물을 길어

올릴 생각을 안하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 모두가 원인일 수 있다.

어떠한 제도가 이런 문제를 초래할까? 시장의 자생적인 동반발전성향을 여러 가지 이념적 이유로, 즉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계급 투쟁적 이념에 빠져, 흥하는 이웃을 폄하하고 취약한 계층이라고 무조건 도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는 경제제도를 만들어 내기 때문인 것이다.

동반성장이 잘되고 안 되고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쌍방의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느냐 아니면 오히려 높이느냐에 달렸다. 협력은 상호간에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경제제도, 즉 경기규칙이 협력에 따라 오히려 거래 비용을 높이고 있으면 당연해 보이는 협력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동반성장은 좋은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원인인 경제제도와 거래비용문제를 고민함이 없이 현상만을 보고 대중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통해 결과를 교정하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역공한다. 시장은 '경제 비효율과 정체'라는 무기로 경제주체들에게 그것도 바로 돕고자 원했던 경제주체들을 어렵게 만든다.

경제는 분해해서 볼 수 없는, 전일적으로 봐야하는 복잡현상이다. 모든 부문이 서로 네트워크화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문만을 따로 생각하는 정책은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수출과 내수부문, 중소기업과 대기업부문,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등은 모두 서로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어느 한 부문이 타 부문을 "착취"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고는 종합적 사고가 아닌 환원주의에 빠져 부문 간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중소기업을 (확일적으로) 키우고 동시에 대기업을 묶어놓으면 기업생태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균형은 하향평준화의 죽은 균형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중소부품회사의 수요가 일어날 것이며, 중소기업이 혼자 투자를 늘리면 누가 그 제품을 소화해줄 것인가? 수출과 내수를 잇는 투자주체로서의 역할은 수출하여 투자할 자금이 있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데 투자능력이 있는 주체를 묶어놓으니 수출과 내수의 네트워크는 약화되게 되는 것이다. 매사에,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은 싫어하고 투자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워지고 명색이 일자리를 늘린다는 선심정책은 난무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흥하는 이웃을 묶고 취약 부문을 지원하면 균형이 달성된다고 생각했으나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려 약자를 더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어렵게 만들어 온 것이다.

서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걸어온 지난 50여 년의 역사와 지난 30여 년의 우리의 경제정책 역사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다거나 양극화를 완화한다거나, 동반발전을 이끈다거나 하는 좋은 뜻으로 도입한 정책들이지만 결국 자본주의 동반발전원리에 역행하여 오히려 돕고자 한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 정책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의 양극화문제는 다분히 인재(人災)에 가까운 것이다.

경제부문들을 서로 대립적으로 보는, 즉 한 부문이 커지면 타 부문이 약화되는 관계로 보는 기계론적 환원주의 경제관에서 탈피해야 한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이웃이 있어 모두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 창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발전, 창발할 수 있어야 모든 부문이 동반성장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2. 양극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양극화는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물론 자본주의 경제는 완전하지 않고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지만-- 민주주의의 부작용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양극화는 바로 사회 민주주의적 이념에 따른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의 소산이다.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자본주의의 조그만 약점을 고친다고 시장의 차별화기능--시장은 항상 성과가 좋은 경제주체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에 역행하는, 무차별적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재분배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앞 선자나 뒤떨어진 자나 모두의 동기를 차단하여 결국 모두의 경제정책은 물론 조그만 불평등을 오히려 증폭시켜 더 큰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일인일표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를 착취와 경제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로 보는 이념과 만나면 대체로 표플리즘 민주주의로 탈바꿈하게 된다. 표플리즘 민주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다하여 흥하는 이웃을 꺾어하고 그렇지 않은 주체들을 우대하지만, 이는 땀에 물이 고갈되어 하루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물이 소량 공급되더라도 물을 퍼 올릴 생각은 안하고 정부를 쳐다 보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양극화현상은 바로 평등주의정책의 결과이다.

선진국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모순론에 따라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사회민

주주의를 자발적으로, 물론 사회주의에 대항한다하여, 추종하게 되었고, 후진국 민주주의는 중산층이 얇아 표플리즘에 빠져 사회민주주의로 흘렀다.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는 발전역행적이며, 양극화의 온상이 된다. 역동적인 경제주체는 역차별하고 취약한 경제주체만 우대하는 정책들은 동기부여를 차단하기 때문에 경제정체를 가져오고 반드시 양극화를 조장한다.

정치경제적으로 사랑받고 우대받는 주체는 늘어나서 번창하고 싫어하는 주체들은 줄어든다. 경제체도가 특정 조건하의 주체들에게만 유리하게 조성되면 세월이 가면 대접 받는 주체들은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주체들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가난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지방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도와준다고 하면 모두다 그 상황에서 안주하게 된다. 무엇무엇 때문이라는 것이 대접받을 조건이 되면 기득권이 되고 안주하게 된다. 자조하고 노력하여, 읍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주체가 대접받도록 동기 부여하는 장치가 없으면 좋은 뜻이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도 바로 표플리즘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 선진국들이 실패한 길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자본주의 4.0 (아나톨 칼레츠키보다 조선일보특집이 더 문제다.)이니, 슈퍼 자본주의(super capitalism, 로버트 라이시)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슈퍼 민주주의(super democracy)나 민주주의 x.0 을 얘기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III. 한국의 개발연대 동반성장의 경험과 교훈

한국의 개발연대, 특히 1960-1990년까지의 한국의 경제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개선시킨 모범적 자본주의 성장 경험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나? 수출주도 성장으로 성장하는 수출기업들이 수출의 과실을 국내투자로 환원시킴으로써 수출이 국내 내수부문과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다. 당시의 한국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독려 하에 내수투자를 늘릴 수 있었다. 당시에는 노조를 지나치게 억압한 문제가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적 노조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수출 많이 하여 대기업이 되는 것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점이 되었으며 경제력집중규제라는 이름으로 대기업들의 국내투자를 규제하는 일은 없었다. 당시에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수도권정책은 없었다. 대기업들이 수출과실을 국내에 환원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수출종합상사들이 수

출을 늘리는 일은 중소기업들과의 연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수출이 바로 중소기업들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그럼 왜 양극화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동반성장이 안되고 있는가? 근로자를 위한다는 전투적 노조방치문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대기업투자규제문제, 지방을 위한다는 수도권규제문제, 대기업들의 문어발을 규제한다 하여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자본채휴 등)을 어렵게 만드는 높은 거래비용 메커니즘문제 등등, 경제적 약자를 더 우대한다는 정책들이 결국은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과도하게 조장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해외에 팔고 소위 비전 높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99%이상이 중소기업이고 88%이상이 중소기업 일자리인 한국경제, 중소기업이 성장보다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음이 더 유리한 인센티브구조를 만들어내는 한국경제가 양극화 문제에 봉착하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 결과이다.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이 우대받는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답은 간단하나 실천은 어렵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늘릴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한다. 전투적 기득권노조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없다. 진정으로 기업투자에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업의 의향은 물어보지도 않고 정부가 나서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책은 성공가능성이 없다.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소릴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국민들도 이제 선택해야할 때가 되었다. 일자리와 양극화해소를 위해 대기업들을 국내로 들어오도록 대기업규제, 수도권규제 등등 평등, 균형, 도덕과 명분을 내세운 정치색 짙은 정책들을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정책들을 지속 강화하여 모두 어려워지는 오늘날의 선진국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계속 따라 갈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제적 차등과 차이가 싫다고 정부로 하여금 시장의 차별화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그에 역행하는 평등주의정책들을 만들어내게 하면 당장은 편해지지만 결국 모두가 하향 평준화되는 실패하는 길을 재촉하게 된다. 국민들도 이제 흥하는 이웃이 되고자 모두 털고 일어나 노력할 것인지 흥하는 이웃의 발목이나 잡고 있을 것인지 선택할 때가 되었다.... 정부에게 내 뿔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나에게 더 큰 경제적 자유를 달라, 결과는 내 책임이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자조하는 국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

■ 성장잠재력제고를 위한 과제

이 제 민 연세대학교 교수

1. 성장동력 약화

97년 위기 이후 성장 동력 약화. 경제발전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 당연, 그러나 추가적 하락.

위기 전 대재벌 기업의 '위험의 사회화에' 의한 투자 위기 후에는 어려워져. 생산성 증가율 상승이 과거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생산성 증가 부진. 대기업 제조업은 상승, 그러나 경제전체로는 부진. 구조조정 의 성격 때문.

국내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총소득으로 보면 성장률 더 크게 둔화. 교역조건 악화가 주 원인.

위기 후 끌려 들어간 국제투자에서 '잃는 머니게임'을 한 것도 중요. 자산가격 상승으로 보면 34천억달러 "국부 유출." 실제로 송금 이루어진 것도 국민총소득 계산에 안 잡혀.

위기 후 중소 벤처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시도했지만, 거품 붕괴와 부패로 동력 잃어버려.

서비스산업 육성.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등도 부진.

반면 고환율 유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 그러나 수출입 의존도가 올라가 교역조건 악화의 효과를 확대함.

행복(혁신)도시 건설, 4대강 사업 등 토건사업도 두드러짐.

국제투자의 머니게임에서 한국도 고위험-고투자 능력 개발 시도했으나 아직은 성과 없어.

성장 잠재력 약화.

재정상태 악화. 위기 후 처리과정에서 공적 자금 투입. 사회안전망 서둘러 구축. 불확실성 증대로 출산율 하락.

기업가 정신 후퇴. 도산과 대량 해고를 겪으면서 불확실성 낮은 직업 선호. 국가

권력에 기댄 직종. 공무원, 국영기업직원과 진입이 제한된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이윤추구행위로부터 지대추구 행위로. 위기 후 개혁이 미국 식 '세계 표준'을 도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역설적 현상.

2. 일자리 부족

이루어진 성장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함.

수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지만, 수출은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에다 그 주체는 자본집약적 생산방식을 택하는 대기업.

4대장 같은 토건사업도 비슷.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일자리 부족은 다시 기업가정신 후퇴를 통해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짐.

일자리 부족 지속되는 한편 교육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

대학진학률 80% 상회.

과잉교육(over-education), 과잉자격(over-qualification).

교육 받은 인력이 일자리 없는 것은 사회 불안의 요인. 1950년대 말 60년대 초 ("우골담" 용어 유행)와 비슷한 위기.

그러면서 최고급 인력 공급에는 문제.

지대추구 사회화하면서 과학기술 및 기업가 인력 질 저하.

두뇌 유출 재역전. 한국 두뇌유출 역전시킨 최초의 개도국이었으나, 위기 후 두뇌유출 다시 시작.

3. 소득분배 악화

일자리 부족은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양극화?)

과거 한국의 '형평을 수반한 성장(growth with equity)' 패턴을 무너뜨려.

한국 수출 지향적 공업화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그것은 개도국에서 실업 내지 잠재실업이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평등화 조건. 사회안전망 부재, 노동조합 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으로만 보면 평등한 구도.

그러나 위기 후 일자리가 창출 안 되자 그런 평등분배의 구도가 깨어짐.
 한편 위기 후 사회안전망 구축은 정부에 의한 교정 폭 확대.
 한국 소득 분배 위기 전 정부에 의한 교정 미미했으나, 위기 후 복지 지출 증가로 교정 폭 증가. 복지지출 비중 국내총생산의 3%에서 8% 수준으로.
 그러나 시장 소득 악화를 커버하지 못 해서 전체로 보면 교정 후 소득 분배 악화.
 위기 전 한국 교정 후 소득분배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불평등한 편이었는데, 위기 후에는 아주 나쁜 편으로 되었을 듯.
 복지 증가 원칙적으로 불가피. 일자리가 복지 대체 못해. 그러나 일자리 부족을 복지 증가로 메운 것도 사실.

4. 해결방안

‘일자리를 수반하는 성장 동력 회복’이 요체. 복지 확대도 불가피.
 재벌 대기업 규제 완화는 답이 아님. 건설산업 구조조정 필요.
 중소 벤처기업 육성 통한 창업 활성화에 답이 있을 듯. 위기 직후 김대중정부에서 시도했다 실패한 이유를 재검토할 필요. 금융 발전(개혁)의 중요성.
 그 외 서비스 산업 육성. 동북아 비즈니스센터 실제 시행과정이 중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예: 국제금융중심지.
 자유무역협정이 성장동력? 불확실성 증폭?
 머니게임 한국이 해외투자에서 잘 할 자신 없으면 외자 유입 규제해야. 외자의 불법행위는 처벌해야.

정부가 창출하는 지대 축소.
 그를 위해 관치경제 지양. 규제 개혁.
 사법 개혁 특히 중요.
 전문직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기.

과잉교육(over-education), 과잉자격(over-qualification) 현상 해소를 위한 조치.
 ‘학벌 현상’ 해소. 교육 개혁만으로 안 되고 총체적 접근 요.
 두뇌 유출 재역전 되돌리기 위한 조치. 돌아 온 인력이 상승효과를 내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돼.

과학기술자 우수한 인력 뽑아서 평생 커리어 관리.

기업가 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정 올리기 위한 노력도 중요.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는 전제 위에서 복지 확대 불가피.

성장과의 관계 보완적.

개방=세계화와 복지 간의 관계.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세계화(예컨

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에는 사회안전망 확대 필수적. '주류경제학'의 결론.

복지와 재정 건전성? 복지포퓰리즘?

그리스 남미국가 등 지배층의 부의 정통성이 없고 사회 갈등이 심한 곳에서 나타나는 경향.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민주정치를 통해 표출될 때, 그것을 개혁으로 정면 해결하지 못하고 선심으로 때우는 것이 복지포퓰리즘의 기본 구도.

한국도 많은 부가 정경유착, 관치금융, 편법상속, 부동산투기, 전관예우, 배임횡령 등으로 형성되었음. 그런 문제가 민주화와 1997년 위기 후 일부 개혁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임.

지난 3-4년 동안은 개혁 역행 현상도 나타났음.

반면 한국인의 민주주의 의식은 누구보다 강함.

복지포퓰리즘을 막으려면 그런 문제의 정면적 개혁이 필수임.

■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

김 태 준 금융연구원 원장

I. 서론

- 금융산업의 발전 및 성장은 경제발전의 핵심과제에 해당됨
 - 금융은 실물경제를 선도(lead)하거나 후행(lag)하는 경향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와 동행할 것으로 기대됨
 -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경제의 성장효과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금융개혁(Financial Reform)이 현재 한국금융의 토대와 기반을 마련

- 한국금융은 개방경제, 수출경제, 글로벌 경제 하에서 시스템 안정과 성장기반을 모색해 왔음
 -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금융시장의 개방은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였으며, 수출경제 기조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극복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안정성과 완충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강화,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의 강화 등이 핵심과제로 추진됨.

- 한편 최근 들어 그리스 채무위기로 촉발된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중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등 금융시장의 위험요인(Risk Factors)이 확대되고 있음
 - PIIGS 국가를 중심으로 한 EU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은 글로벌경제의 성장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수출중심의 신흥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음
 - 중국경제의 경우 세계경제의 신성장엔진(New Growth Engine)과 완충국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 인플레이션 및 부동산버블, 소득불균형, 회계부문의 불투명성 등 대내적 문제로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위축될 수 있음

- 2011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세계경제와 사회적 경제적 요구의 변화는 한국금융의 안정성 및 성장기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2008년 이후 국제적 정책공조와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기조에 이어서 발생된 재정위기의 해소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더불어 금융상황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됨
 - 또한 월가시위(Occupy Wall Street)와 서민금융에 대한 높은 수요, 학자금의 조달과 청년창업 등의 지원, 수수료 및 금리체계에 대한 관심 등 금융부문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금융의 발전과 성장은 선진경제 및 중국경제의 변화와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감안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금융서비스의 역할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II. 금융시장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방안

- 금융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방향과 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됨
 - 첫째, 실물경제의 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금융부문 자체의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 둘째, 금융부문의 성장기반은 실물경제에 대한 역할 강화와 금융자산의 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셋째, 금융부문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 요구됨

1. 안정성 제고 방안

- 대외 금융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및 외화유동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외화자금 조달기반의 안정화를 통해 외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함
 - 단기외채 비중의 축소와 중장기 조달비중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외화예금의 확대 및 약정형 차입(Committed Line) 등 외화수신기반을 다양화해야 함

-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외화공급의 일시적인 위축에 대비하여 기업부문의 무역금융이나 결제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화자산의 규모를 계속 늘여가야 함
- 대내외 실물경제의 둔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는 완충력 제고를 위한 내부유보의 확대와 충당금 적립의 강화, 자기자본비율의 제고에 초점을 둔 경영구조를 유지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권은 실물경제 둔화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이익잉여금의 적극적인 유보를 통해 중장기자본비율의 개선을 도모
 - * 대외적 측면: 세계경제의 둔화 ⇒ 수출 및 매출 감소 ⇒ 기업의 수익성 악화 ⇒ 기업 관련 부실 증가 ⇒ 금융건전성 악화
 - * 대내적 측면: 기업실적 악화 ⇒ 기업의 구조조정 확대 ⇒ 고용기반 약화 ⇒ 가계소득의 감소 ⇒ 가계관련 부실 증가 ⇒ 금융건전성 악화
 - 경기하락 국면의 장기화 혹은 이로 인한 소비위축 등이 지속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자산부실에 대비하여 충당금 적립수준 혹은 커버리지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정책도 고려
- 가계를 중심으로 부채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고 상환확대에 따른 시스템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는 2011년 이후 안정화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상환국면 전환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상환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마련해야 할 것임
 - 안정적 상환과 상환유인 확대를 위해 고정금리부 대출의 확대, 조기상환의 촉진, 상환금액의 만기별 조정 등 신용컨설팅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의 중장기 적정화를 도모해야 함

2. 성장기반의 마련과 과제

- 금융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중소기업금융은 여신형 서비스(예: 대출) 이외에 자본형 서비스* 기반의 확충을 통해 성장단계별, 업종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 엔젤투자, 벤처투자, 모태펀드, 바이아웃, 프리보드, 상장 등

- 특히 중소기업 금융은 보증제도와 모태펀드 등과 같은 공적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계속 높여나가야 함
- 저축률의 제고와 투자자산의 대내외 다변화 등을 통해 금융자산의 축적을 도모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중장기성장이 이루어져야 함
 - 2000년대 이후 가계 주택수요의 확대와 소비축진 등으로 부채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실물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축소됨
 - 금융산업의 성장성 제고는 저축율의 제고와 이를 통한 금융자산의 축적을 도모하고, 특히 금융자산의 다변화*를 통해 금융자산을 통한 소득흐름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 장기채권 및 주식, 연금상품 등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더불어 해외자산의 확대 등 지역적 다변화도 요구되며, 특히 동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국제화 확대도 모색해야 함

3. 금융의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

- 금융의 사회경제적 역할은 공익활동의 확대 이외에 금융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및 한계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급 및 결제서비스 등의 인프라 기능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대상 관련 서비스의 기회와 혜택을 확대하여 금융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됨
 - *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저소득계층의 자녀 등에 대한 금리혜택이나 수수료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특히 지역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서민계층이나 영업지역 내 주민과 소기업 등에 대한 밀착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녹색산업 육성

송 병 준 산업연구원 원장

□ 녹색산업 신성장동력화 배경 및 필요성

- 에너지효율이 낮은 우리 산업부문은 에너지 가격 불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의 무 등 에너지·환경 관련 대외환경에 취약
- 이런 대내외 제약 하에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장패러다임으로 채택하여 에너지·환경 문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신성장동력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
-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전세계 녹색성장 조류에 합류함으로써 대규모의 녹색성장 관련 글로벌 수요를 활용 가능한 반면, 전세계가 녹색성장이라는 동일한 패러다임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함으로써 녹색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
- 녹색산업은 녹색성장의 동인을 구성하는 핵심분야일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의 산업적 기반이며 여타산업의 녹색화 촉진의 원천이므로 그 발전전략의 수립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임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응수단

□ 녹색산업의 정의, 특성 및 현황

- 녹색산업은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산업, 고효율 모터 등과 같은 에너지효율화산업 그리고 기존의 환경산업 등이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LED, 친환경 자동차 등이 급성장하고 있는 녹색산업으로 주목

< 녹색산업의 범위 >

	녹색산업의 범위
OECD (1999)	청정기술산업 그룹, 자원관리산업 그룹, 오염관리산업 그룹
EBI (2004)	환경설비, 환경자원, 환경서비스
영국 정부(2009)	신재생에너지부문, 신저탄소부문, 환경부문
미국 California주 (2009)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존자원의 재활용, 에너지 효율 제품 제조·유통·건설·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 자연제품 및 지속가능한 제품 제조 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한국, 2010)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

- 기존 주력산업에 비해 녹색산업은 요소, 시장, 발전단계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주력산업에 비해 뚜렷이 대비되는 특성을 보유

< 기존 주력산업과 녹색산업의 특성 및 발전 패러다임 비교 >

	기존 주력산업	녹색산업
요소	요소집약적 -노동(예: 섬유) -자본(예: 철강)	기술집약적
기업규모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도 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 가능
시장창출	기존 시장기반	규제·정책에 의해 창출 (예: 신재생에너지)
시장접근	내수 시장→수출 시장	시작 시점부터 글로벌 시장
전략품목	최종재	소재·부품
선진국과의 격차	격차 큼	같은 출발선상
기술위상	각 업종별 독자적 기술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에 핵심 기술 제공(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등)

-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 5년간 약 28.2% 성장하여 2009년 1,620억 달러에 달했으며 향후 2015년에 약 4,000억 달러, 2020년에는 약 8,000~10,0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녹색산업의 위상

- 주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위상을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의 경우 Value Chain별로 선진국은 원천기술, 중국은 규모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양상
- 주요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의 경우 이미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풍력도 거의 완성단계이고, 연료전지 역시 부품·주변기기 중심의 중소기업 신규참여로 활발히 추진 중인데 반해, 해양바이오 등은 아직 산업화 전단계
- 시장 및 수요조건 측면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분야는 그 동안 발전차액 보조, 보급 지원 등으로 초기 시장창출을 견인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 설치 규모가 저조
-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태양광, 풍력 및 연료전지 분야에서 국가적인 R&D에 주력하고 있으나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이 여전히 취약
- 관련 및 지원산업 여건 측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연관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으나, 장비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열위인 상황이며 부품·소재 면에서도 기반이 취약
- 기업전략 및 경제구도 측면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공존하는 산업구조를 형성
-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각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 움직임에 따른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수요 급감과 중국의 재고 소진을 위

한 물량공세에 기인한 공급 과잉의 결과, 관련 업계는 극심한 글로벌 생존경쟁에 직면

- 특히 태양광의 경우 현재 전세계 재고 물량이 1년 수요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모듈 가격이 1 달러 이하로 급락하여 업계의 가동률도 급락
- 업계에서는 내년 글로벌 태양광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원료인 폴리실리콘부터 모듈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전 분야 가격의 폭락의 여파로 특히 국내 중소기업은 생사의 기로에 노정
-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둘러싼 위기상황에 대비한 전략이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 양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 다행스럽게 지난 10월 말 정부에서는 그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각적인 신재생에너지 수요 진작과 R&D 투자 증대를 천명

□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지원 방안

- 국내 녹색산업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의 경우 전자, 풍력의 경우 조선 등 관련 주력산업과 효율적으로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데, 특히 태양광의 경우 우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및 화학 등과, 풍력의 경우는 많은 해양구조물 공사 경험이 있는 조선산업과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또한 기존 주력산업과 뚜렷이 대비되는 녹색산업의 발전패턴을 감안할 때 녹색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과거의 산업육성정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
- 녹색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녹색기술이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속도가 매우 빠르는데 반해 해외 소재·부품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조립 중심의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녹색 산업은 부가가치사슬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

- 자금력과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는 녹색기술개발은 대부분이 대규모 막대한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
 - 녹색산업의 근간인 핵심 부품·소재의 대외의존도 심화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 지원 또는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SCM)를 통한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에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할 필요
- 이러한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 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될 필요
 -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촉진되도록 가격지원 또는 세제지원 등의 조치를 제공하고 정부 조달에서 일정 부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
- 중소기업 가운데에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투자여력 부족으로 녹색기술 개발이 어려운 기업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

■ 제 2 주제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

좌 장 : 현 정 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종합토론 : 이 원 덕 (사회통합위 계층분과 위원장)

정 윤 (KAIST 초빙교수)

김 용 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류 석 춘 (연세대 교수)

■ 양극화와 갈등 해소/사회통합

이 원 덕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 위원장

1. 양극화와 사회갈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 6. 23-7. 8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계층갈등(갈등지수 3.92)으로 인식. 노사갈등(3.91) 환경갈등(3.47), 지역갈등(3.47).세대갈등(3.43), 이념갈등(3.41), 문화갈등(3.19)에 비해 계층간 갈등의 심각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갈등(1순위 해결과제)으로 44%의 응답자가 계층갈등을 지적하여, 노사갈등(23.8%), 지역갈등(10.5%), 환경갈등(6.4%), 세대갈등(6.0%), 이념갈등(6.0%), 문화갈등(2.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계층갈등의 심화는 일차적으로는 소득의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데 기인함
 -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소득5분위배율(소득상위20%/하위20%)이 2000년에 4.5배 수준이었으나 2008년 이후 6배로 급속하게 높아졌음. 앞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80.2%가 한국사회의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 빈곤층(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포함 전가구 기준) 비율은 2006년 16.28%에서 2010년 18.30%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비율은 미국, 칠레, 멕시코 등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6-8% 수준인 독일,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 11.1%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소득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됨과 동시에 물가상승, 특히 최근의 전월세 급등으로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는 더욱 악화되어 하위 20%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이 2009년 3/4분기 54.9%에서 금년 3/4분기에는 59.3%로 급증하였음. 그 결과 이들 가구의 순자산액은 지난 1년 사이에 5.3%나 감소하였음.(통계청, 가계동향; 한국은행, 가계금융조사)

- 이와 같이 저소득층은 최근 소득은 줄고, 지출은 증가하는 이중고, 즉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의 넷 크래커에 시달리고 있음
- 양극화의 심화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과 대기업 정규직중심 노동조합 이해관계의 불안정한 동거 또는 양자의 담합에도 그 원인이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개혁, 즉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은 노동조합의 저항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고, 고용감소 또는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추진.
 - 그 결과 고용율이 외환위기 이후 60%수준에서 답보상태에 있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하락하고 있음. 노동소득 분배율은 2010년에 59.2%를 기록하여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임.
 - 또한 대기업 고용 비중이 우리나라는 13.7%에 불과한데 비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30%이상이며 미국과 캐나다는 50%에 달함.
 -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10년 현재 5,685천명(노동계 발표 8,775천명)에 달하고 이들의 사회보험(직장보험 기준) 가입율은 40% 수준에 불과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54.5%는 비자발적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였고, 1년 후에 비정규직에 체류할 확률이 61.4%에 달해 비정규직 고용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정책 및 사회보장 확충을 통해 양극화의 완화 및 빈곤층 소득 지원에 노력해왔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임
 - 소득재분배정책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는 우리나라가 9%(2010년 현재, 전국 1인이상 및 농가가구 포함) 수준인데 비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40%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도 30%를 상회함.
-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경제사회적 형평성에 우리 국민의 주관적 평가도 부정적임(앞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응답에서 “그렇지 않다”가 42.2%로 “그렇다” 14.1%의 3배에 달함

- 우리 사회에서 평생 노력해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가 44.8%,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가 34.7%에 달해 개발연대에 노력을 통해 신분상승을 하거나 이른바 “개천에서 용난다”는 빈곤층의 꿈과 희망의 상징이 상실되어가고 신분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
- o 주기적 금융위기와 그 부담의 국민귀착, 이른 바 월가 자본주의의 따뜻한 심성, 도덕, 절제의 상실 등은 넷 크래커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의 박탈감과 불만을 증폭시키고 계층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2. 계층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 o 양극화 심화와 빈곤층 증가,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기조전환이 필요함
 - 개발연대에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성공했듯이, 이제 사회개발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 국가고용전략, 국가복지전략, 국가능력개발전략등 사회개발의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사회개발전략은 소득이전을 통해 빈곤 탈피를 지원하는 전통 복지(welfare)를 뛰어넘어 고용복지(workfare), 능력개발복지(learnfare)를 통해 빈곤 해소와 사회갈등 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함임
 - 사회개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지속성장을 매개해주는 정책지표, 예를 들어 고용율, 빈곤율, 소득분배의 형평성, 평생능력개발,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해나가야 함
- o 사회개발전략의 기본 방향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임. 중산층 비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경제가 안정적이고 사회가 통합적이며 지속가능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음
 - 중산층 비율(중위소득의 50-150%)이 '96년 68.5%에서 2010년 58.4%로 급속하게 감소. 중산층 이탈자의 대부분은 빈곤층으로 전락.(유 경준,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 특히 근로계층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도록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양극화의 완화와 성장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함
 - 현재 연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 1800여 시간에 비해 30% 정도 장시간임.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과 함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특히 대기업 부분의 양질의 일자리수가 늘어나도록 함
 -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보호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이 기피하고 천시받는 근로빈곤층의 대명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하나가 되도록 함
 - 이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정규직 단시간 근로형태 등이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

- 고용, 복지 등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동시에 중복과 행정의 낭비 등 비효율을 제거함
 - 현재 각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사회정책서비스가 300여개나 되고 이들간 조정, 연계, 통합이 부족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복지수혜에서도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 공존

- 우리사회에서 빈곤은 교육격차를 통해 대물림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빈곤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지원
 - 미국의 BELL, Teach for America 등과 같이 부모의 경제적 지위 때문에 자녀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하고 이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학습지원

-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부유층 및 지도층의 책무(noblesse oblige) 실행이 필요
 - 지도층의 조세, 병역의무 솔선수범은 기본이며, 나눔과 봉사에 앞장섬으로써 열패자의 쇠외감과 박탈감을 완화시켜줌

■인적자원 역할 제고/교육 및 과학기술 혁신

정 윤 KAIST 초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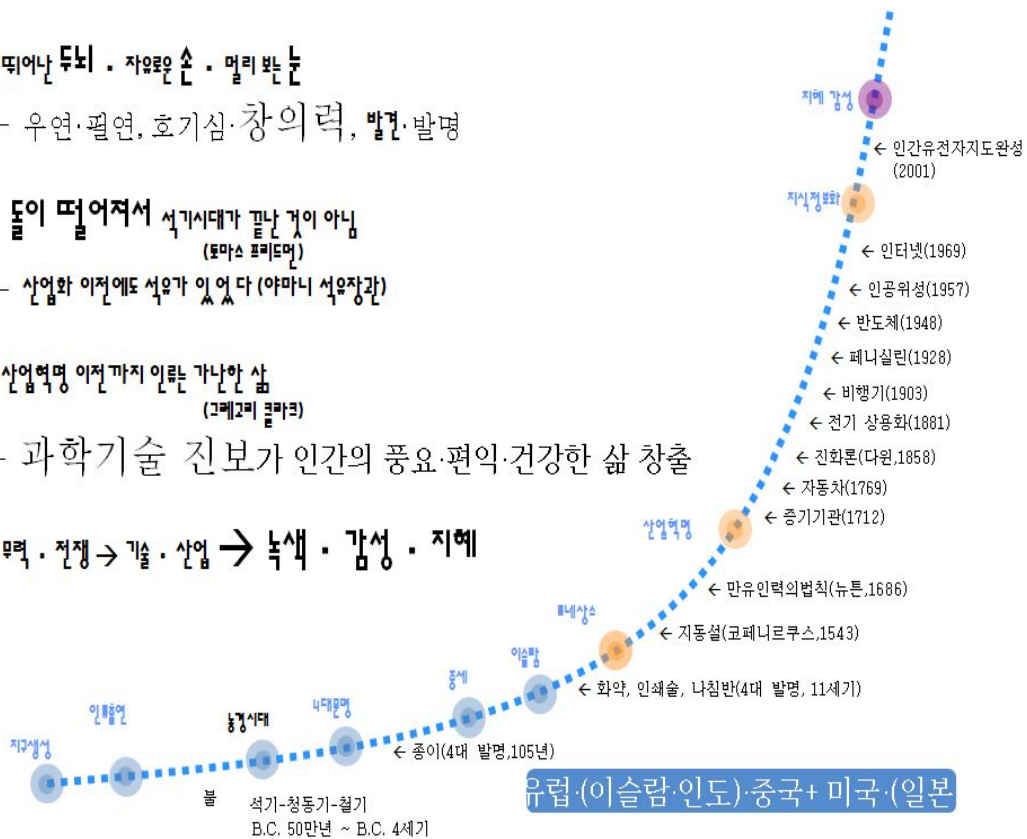
○ 발견과 발명의 인류 역사 -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 발전

- 뛰어난 두뇌 . 자유로운 손 . 멀리 보는 눈
- 우연·필연, 호기심·창의력, 발견·발명

- 돌이 떨어져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님
(토마스 프리드먼)
- 산업화 이전에도 석유가 있었다 (아마니 석유장간)

-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류는 가난한 삶
(그레고리 클라크)
- 과학기술 진보가 인간의 풍요·편익·건강한 삶 창출

- 무력·전쟁 → 기술·산업 → 녹색·감성·지혜



근대이후 과학발전 - 과학과 기술의 연계 (독·미·일 - 대학·민간기업 육성, 전기·화학공업 -> 수송·IT 산업)

○ 21세기 세계질서 변화

세계와 · 지식정보와, 개방 · 자유와 ⇒ 지혜와 감성

21C 10년간

- 세계 1등 기술·산업 - 스포츠·문화예술 등
- 글로벌기업(다국적기업) (친환경·사회공헌·윤리경영 - 구매·인사·총무 총괄)· NGO
- 무형자산의 증가 - 정보, 기술, 마케팅, 브랜드
- 전문성, 다양성, 창의성 - 인재, 속도, 국제화
- 과학기술 - 사회, 문화에 영향과 역할 확대(지구와 인류 현안 해결 선도)
- 세계경제전망 불확실 - 금융위기극복(정부개입, 규제·감독, 국제공조)·신흥국(BRIC's)부상
 - 냉전종식, IT 산업성장(90), 21c Pax Americana(Neocon, 911, 아프간·이라크 전쟁, 금융위기), 새로운 책임·미국재건(09 오바마정부 출범)- 회복(더블 딥), 부채한도상향, 재정긴축, 국가신용등급 하락
 - 중국 성장(외환보유고 3조불), 차이메리카(중:수출·저축, 미:수입·소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자원 확보
 - ※ 아랍권 민주화-자스민 혁명(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과 일본 지진해일·원전사고, 유럽 재정·금융 위기
- 아시아·미국·유럽 다극화 체제(정치·경제) - G20 정상회의
 - 아시아: 역사·문화 배경, 산업경쟁(전자·자동차·조선·철강·화학)

새로운 10년 -2011

-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 - 풍요롭고 건강한 인류의 삶 구현”
- ※ 산업화·도시화 - 환경·자연보호 - 지속가능발전 (30년간 30% 생물종 멸종·40년간 40% 북극 해빙·목재, 사료, 취사, 연료 - 산림훼손)
 - ※ 지속가능발전개념(Brundtland)- 미래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실시킴이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
 - 개인·조직·국가·세계 - 지혜(지식의 선용)·영성(인간중심)·융합
 - 단품중대량생산 → 다품중대량(소량)생산(의류, 신발, 휴대폰, 자동차 등 - 기능, 디자인)
 - 지구와 인류 현안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질병, 물과 고령화 등)해결
 - 소통과 대화 - 지식분야의 융합 - 깊이 파고 담을 낮추고
 - ※ Space, Matter, Time의 연계, 융합
 - 창의·인성 균형의 리더 요구
 - “보이는 자산 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 중요 - 정신·의식”(엘빈 토플러)
 - “영성시대의 대두 - 영혼이 있는 기업 성공”(존 네이스비츠)
 - “세계기업, 선형을 경영하라”(빌 게이츠)
 - “과학기술의 소통·이해의 확대”(블라디미르 드 세미르)
 -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 지혜와 국제화, 창의성과 인성교육

○ 주요국의 대응 전략 - 첨단기술개발·우수인재 양성

미국 : STEM 교육 강화

- 전세계 R&D 투자의 30%
- IT 기반 선두, 뉴아폴로 플랜(대체에너지)

중국 : 질적 성장과 우수인재 양성

- 개혁개방이후 70만명 해외유학(20만명 귀국)
- R&D 인력 230만명 (세계1위)
- 211공정(21세기 100개 세계 선도 수준 대학 육성)

○ 전세계 과학기술 투자(역량)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전망)
미국	383.6(▽3.5%)	395.8(3.2%)	405.3(2.4%)
(아시아)	372.5(4.2%)	400.4(6.7%)	421.1(5.2%)
(유럽)	267.0(▽4.2%)	268.5(0.6%)	276.6(3.0%)
일본	139.6(▽5.5%)	142.0(1.7%)	144.1(1.5%)
중국	123.7(20.9%)	141.4(14.3%)	153.7(8.7%)
한국	41.4(▽0.4%)	42.9(3.6%)	44.8(4.4%)
인도	28.1(5.2%)	33.3(18.5%)	36.1(8.4%)
전 세계	1,107(▽1.3%)	1,150.6(3.9%)	1,192.0(3.6%)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2011 Global R&D Funding Forecast.(2010). *R&D Magazine*, December, 1-34.

- 2011년 중국의 R&D투자는 1,537억달러(PPP(구매력평가)기준)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로 부상할 전망
 - R&D 투자 증가율(2011년)이 선진국 대비 3배 이상인 8.7%를 기록
 - 2022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美 바텔연구소)
- 중국은 글로벌 R&D 인력의 20%(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고급연구인력은 115만명으로 미국(140만명)에 이어 2위

○ 지구와 인류의 현안

분배의 불균형 - 성장의 한계

- 빈부격차(부의 낭비, 선진-신흥국) - 토지·자원, 인력·생산성, 과학기술 지혜·융합, 영성·공헌 소통의 시대
- 착하고 똑똑한 인재, 무한경쟁·승자독식
- 아름답고 깨끗한 직 - 풍요롭고 건강한 삶 (파라다임 전환)
-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질병, 물, 우주·해양개발

○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 육성 전략

- ☞ 융합적(학문·교양·자세) 사고의 세계 선두 수준의 글로벌 인재 육성 ☞
 - 초·중등 교육
 - 창의·인성 - 융합교육
 - 체험·봉사 - 교육기부(산·학·연) 운동
 - 영재고, 과학고, 과학중점고, 과학예술고 - STEAM 교육 등
 - ※ 학생생활기록부 - 입학사정관
 - 대학(원) 교육 - 이공계 인재양성
 - 융합 교육 확대 (기술·인문·예술·교양)
 - 봉사, 참여, 소통 (과학나눔 봉사단)
 - 영어 국제화 (포럼, 동아리, 학생교류)

- ☞ 우리의 비교우위 역량 - 지구인류 현안과제 해결 ☞
 - ※ 미래 유망 기술분야 : 에너지·환경, 보건의료·신약, IT기반 로봇·우주
 - 세계 10위권의 사고와 전략 - 창의·선도의 정신
 - 국가 R&D : 미래선도, 신산업 창출 - 집중과 선택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질병, 물, 우주·해양개발)
 - 국가연구개발사업효율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정책, 예산, 기획, 평가 등 총괄조정)
 - 우리 system의 선진화 (출연연 - 산·학·연 및 국제역량 집중)
 - 국가 대형 시설의 활용제고(핵융합, 가속기, 위성시험, 원자로, 임상실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 성과 이전 및 활용 - 가치 창출 극대화 (지식재산·출원과 침해)
 - 화공·기계, 물리·전자, 의·약학 - IT 융합(보건의료, 신약, 바이오에너지, 식량)
 - 과학소통·이해 - 합리적, 과학적 사고 (PCST, STS, AAAS)

■ 고용창출형 복지 정책 방향

김 용 하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1. 고용창출 복지전략 수립 필요성

□ 분배구조의 변화와 고용전략의 필요성

- 최근 분위별 소득증가 패턴은 하위 소득분위의 소득증가율이 평균 소득증가율에 못미치고 있어 경제 성장과 분배 개선이 병행하는 Trickle-down 효과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음.

[그림 1] 2003-2008년간 비농가 가구 분위별 소득증가율(%)



- 상위분위의 소득증가율이 하위분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의 역진성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볼 때 크게 완화된다는 점과, 하위분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높다는 점은 재분배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중하분위 계층에게 안정적 소득을 제공해줄 일자리 창출 필요

□ 고용여건의 변화

- 제조업 부문의 고용흡수력 변화
 -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는 제조업의 노동수요가 둔화되고 서비스업의 노동수요가 증가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국면에서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저숙련·저임금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중산층의 안정적 소득증가에 기여하지 못함.

○ 사회서비스부문 미발달

- GDP 대비 사회서비스 비중을 실질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답보 상태에 있음.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GDP 대비 비중: 1.5('80)→2.9('90)→2.4('00)→2.7%('07)
-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은 약 6.6%로, OECD국가 평균인 16.1%의 절반에도 못 미침.
- 의료·보건·사회복지의 성장기여율(3.2%)은 선진국(5.4~10.5%)에 비해 낮은 편이나 고용탄력성은 우리나라(1.84)가 선진국(0.49~1.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부문은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확대 과정에서 경제성장세에 대한 기여도와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표 1> OECD 주요 국가의 전체 고용비율 및 보건복지 고용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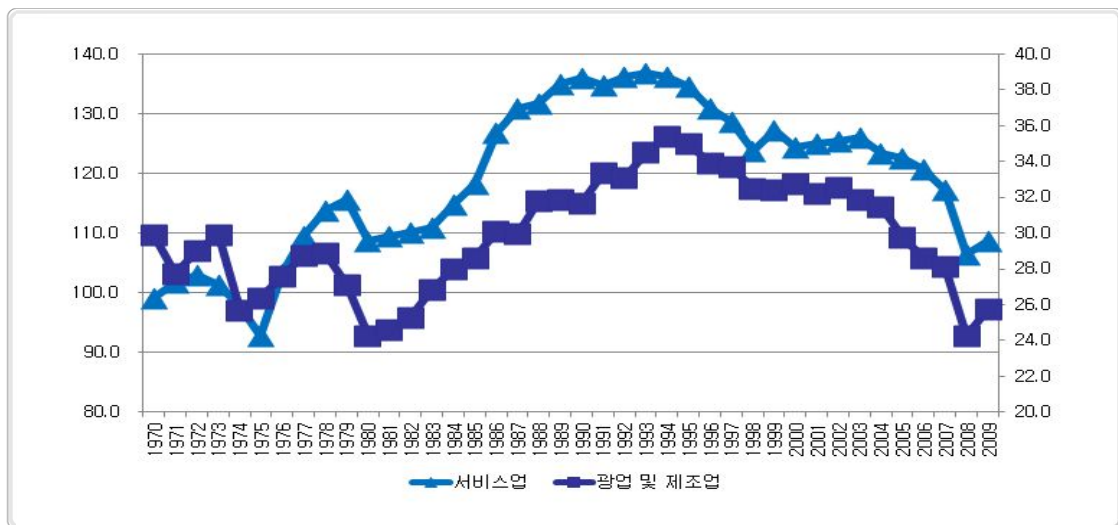
국 가	고용율	1990	1995	2000	2005	2007
노르웨이	전체	75.6	75.1	79.2	76.7	78.5
	보건복지	15.0	17.2	17.8	19.4	19.4
덴마크	전체	77.1	74.5	77.0	76.8	78.6
	보건복지	16.6	15.9	16.6	17.2	16.7
스웨덴	전체	84.4	73.6	75.6	75.2	77.2
	보건복지	-	16.4	16.4	16.9	-
프랑스	전체	60.4	59.5	61.5	63.5	64.3
	보건복지	9.5	10.9	11.2	11.8	12.2
영 국	전체	73.7	70.4	73.4	74.2	73.9
	보건복지	-	10.6	10.5	11.6	11.7
미 국	전체	74.3	74.7	76.4	74.2	74.6
	보건복지	8.3	9.3	9.4	10.5	10.8
독 일	전체	64.8	65.2	66.2	66.5	70.1
	보건복지	7.2	8.6	9.4	10.4	10.4
호 주	전체	69.2	68.7	70.4	73.0	74.5
	보건복지	8.7	9.1	9.7	10.4	-
일 본	전체	72.7	74.2	74.4	75.1	77.1
	보건복지	4.2	5.1	6.3	8.5	9.5
한 국	전체	63.4	65.9	64.5	67.7	68.3
	보건복지	-	1.5	2.0	2.8	3.2

주: 일본의 2007년 자료는 2006년 일본 통계청 자료
 자료: OECD STAN DB를 이용하여 산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확대의 효과

-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민의 기본적인 육체적·정신적 역량을 유지·증진시킴으로써 인적자본 투자의 토대를 형성
- 노동공급 증대효과
 - 노동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가구 내의 서비스 수요(보육, 간병, 노인 돌봄 등)에 의해 노동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집단에게 경제활동의 기회 제공
 - 특히 고학력 여성이나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양질의 노동공급이 확대
- 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효과
 - 가계 내에서, 또는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의 산업화·시장화를 통해 GDP 증대 효과

[그림 2]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 변화추이



자료 : ecos.bok.or.kr

- 사회통합 제고 효과
 - 빈곤층 추락의 주된 원인이었던 고용불안(낮은 고용안정성, 낮은 소득, 부족한 취업기회)을 해소함으로써 중산층 축소를 방지하고 빈곤층의 중산층 재진입을 용이하게 함.
 - 사회복지의 수혜계층을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함

으로써 복지 확대에 대한 계층적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취약계층 중심의 시혜적 복지 → 중산층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 과정에서 종사상 지위 분포가 변화(무급가족 종사자와 자영자의 축소, 근로자 비중 증가)하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제고되고, 따라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2. 고용창출형 복지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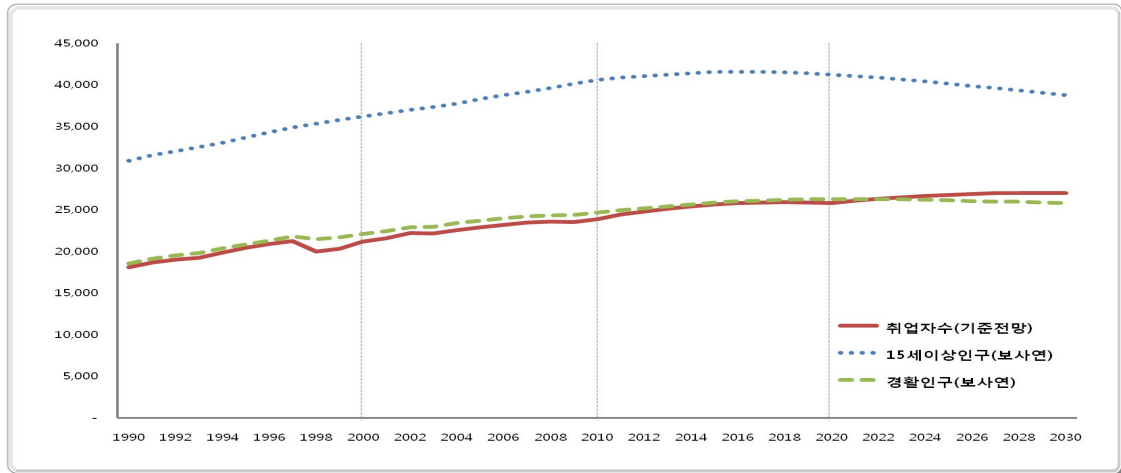
□ 고용정책 기초 정립 필요

- 일자리 대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노동력 부족국인지 노동력 잉여국가인지 명확히 해야 함.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노동력 부족국이라는 전제하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청년·여성·중고령층 실업 문제에서는 일자리 부족이 지적
- 정부는 우리나라의 적정인구와 생계수단 등에 대하여 비전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 경기가 불황일 때는 생계형 일자리 제공이 관건이라면 경기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괜찮고 안정성도 높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관건

□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력 수급 전망

-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지만 중심 노동력 인구(24세~55세)는 이미 감소가 시작되었지만 2030년대까지는 노동력 부족현상은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현재 노동력 절감형 기술발전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 청년, 여성, 중고령층 등의 유희노동력 Buffer가 존재
 - 청년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 해결 가능성
 - 여성취업 활성화로 선진국형 여성고용률(61.1%)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 고령자도 근로참여 의욕이 높아 선진국형 근로동기 부진문제가 아직은 현재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노인고용률 38.3%).

[그림 3] 2030년 이전의 노동수급 전망



□ 서비스 일자리 중요성 부각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고용지표에 따르면 특정산업부문에서 10억원의 생산이 늘어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해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8.1명에서 2007년 13.9명으로 줄었음. 특히, 제조업의 취업유발 계수는 13.2명에서 9.2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수출의 취업유발 계수는 2000년 15.3명에서 2007년 9.4명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에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도 하락하고는 있지만 18.1명으로 제조업의 두배 수준을 유지함. 그렇지만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것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은 것이 주원인이므로 서비스업 진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서비스업 일자리 중 그 자체가 생산적인 전기·통신·금융·운수 영역은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분의 서비스 일자리는 제조업의 성장이 전제되어야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인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고소득 일자리를 약간 증가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함.
- 전통적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함. 대기업 대자본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시장까지 잠식하는 것은 적절히 통제되어야 함. 동네음식업, 동네수퍼, 미용실 등과 재래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개인서비스업에 존재하는 각종의 규제도 풀거나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
- 보건복지 부문 일자리 중 상당부분은 조세나 사회보험료에 의존한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더욱이 보건복지

서비스 일자리 중 상당수는 돌봄(care)과 관련된 것임. 이들 일자리에 대한 보상수준은 높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이러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의 임금 혹은 처우 개선 필요

□ 사회안전망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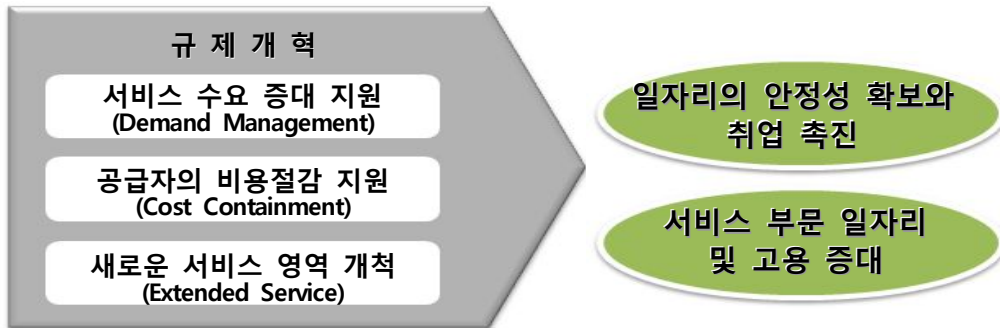
-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 지더라도 국민 불안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우리나라보다 실업율이 두배 이상 높은 데도 불구하고 서구사회가 안정적인 것은 바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에 기인함.

□ 보건복지 일자리는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일자리이지만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 종합적, 적극적인 정부노력에 의하여 고용의 규모나 질이 가변될 수 있음.

- 일시적인 예산투입을 통한 보건복지 일자리는 단기적이고 만들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불황 대응을 위한 소득이전용 일자리로 활용할 수 있을 뿐임.
-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일자리는 규제완화 혹은 강화 등을 통하여 만들 수 있으나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규제 변경에 따른 갈등 조정이 필요함. 보건의료 서비스와 보육서비스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증가 주장이 대표적임.
-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선진국에 비하여 저조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도입 혹은 확충이 있어야 가능함. 대부분 노인 장애인 보육 등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됨. 그러나 이러한 제도 확충에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함으로써 재원조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민간 중심의 보건복지 산업에서 창출됨.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이지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R&D 등 정부의 초기투자를 통하여 산업발전이 촉발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전략

- 서비스 수요증대 지원: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 내용 확대를 통해 수요를 증대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증대 도모
- 공급자의 비용절감 지원: 서비스공급의 직·간접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일자리의 안정성과 decency를 증대하고 취업 촉진
- 새로운 서비스 영역 개척: 국민의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민간 시장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관련 일자리 창출



■ 투명성 제고/신뢰/사회적 자본

류 석 춘 연세대학교 교수

2011년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0회에 걸쳐 보도된 한 언론사의 탐사기획 기사 ‘정치자금 겉과 속’은 거센 후폭풍을 일으켰다. 18대 국회의원 302명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 겉과 속’ 홈페이지는 지금도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http://event.kukinews.com/2011/political_fund/main.asp).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2004년 개정된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한국 정치를 과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도 정치권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우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번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현재의 방식은 일반 유권자가 정보에 접근하는 장벽이 너무 높다. 정치자금법 42조는 선거비용 외에 평상시 정치인이 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를 알려면 해당 지역선관위(비례대표는 중앙선관위)를 찾아가거나 복사본을 우편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시한도 연중 3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우편요금과 복사비는 시민 부담이다. 또한 300 만원 이상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선관위로부터 받아내더라도 인터넷 공개는 제한돼 있다. 왜냐하면 42조 5항은 정치자금 기부(후원)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기관은 선별적으로 정치자금 내역을 활용해왔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지난 19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정치인들의 후원금 내역을 95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요청해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올

해 초 일부 정치인의 후원내역을 뒤져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로비를 수사했다. 만약 정치자금 정보가 인터넷으로 '항시' 공개됐다면 검찰이나 청와대가 나서기 전에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시와 검증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후원금 내역의 공개 범위도 지금보다 더 넓어져야 한다. 현재는 연간 300만원(대통령 후보 후원금은 5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청목회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치자금 후원이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을 했다면 그 기부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기부자의 소속기관과 대표자 이름도 신고사항에 포함시키고 또한 주부와 같은 경우는 남편의 직장을 명시해 후원금 '쪼개기'가 없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개별 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어떤 용도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자금의 집행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제37조 1항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출의 상세 내역은 '지출의 일자·금액·목적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엔 지출의 상세 내역이 표시되지 않는 항목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예가 지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카드 대금'이다. 카드 대금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치자금 계좌에서 돈은 빠져나갔지만 유권자들이 그 상세 내역을 볼 수 없다. 의원들은 상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지만, 선관위가 공개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의 기록만으로 유권자가 그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제2조 2항의 입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다.

넷째, 국회의원이 정책 개발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파악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과 함께 이와는 별도로 국회사무처 등에서 청구해 받아 쓴 다른 정책연구 비용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법 7조는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정보 공개를 선별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는 “지출 증비서류(영수증)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이 준비 중인 정책의 세부내역이 나타나게 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지급하는 정책연구비는 대부분 의원들의 공개 세미나·토론회 비용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가 즐비하게 붙어있고, 의원들은 토론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다. 국회사무처가 비용 내역을 감출 이유가 없다.

다섯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별정직 공무원인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정치자금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2006년 9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 수 국회의원들은 ‘격려금’ 등의 형식으로 보좌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의 인건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구 사무실 등의 상근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국회에서 보수가 나오는 국회 보좌진과 달리 지역구 상근 인력은 의원 대다수가 정치자금으로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행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의원들이 상여금(격려금)을 지급한 후 그 돈을 다시 의원 본인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여금(격려금)이 돈세탁의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여섯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도 문제이다. 아래 그림은 선관위의 알쏭달쏭한 잣대를 잘 보여 준다. 그러다보니 정치자금을 쓸 수 있는 정치활동과 정치자금 지출이 금지된 사적 경비를 판단하는 잣대는 선관위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쥐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범규정상 정치자금은 사적인 용도로 써선 안 되도록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면 어디든 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고무줄 잣대라도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알쏭달쏭한 정치자금 지출 가이드라인

정치자금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법에 위반 되는 행위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통상의 격려금 지급	국회 별정직공무원인 보좌관·비서관·비서에게 상여금 지급
인턴사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통상 업무 외에 정책연구개발을 한 대가로 정해진 보수외의 급여를 지급	인턴사원의 생계보조를 위해 정치자금을 지출
보좌관 등 소속 직원에게 설·추석에 제공하는 선물 구입	동료 의원에게 설날 지역특산물을 정치자금으로 선물
지역현안 간담회의 밥값 등 비용을 기부행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지출	선거구민 등 지역구 관련 인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관련 밥값과 차량유지비 지출	지방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대금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지출

(자료:선거관리위원회)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마저 공감하고 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내년 양대 선거를 대비해 각계 의견을 수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합리적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4월 공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에서 정치자금 내역의 인터넷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정책자료집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부정 방지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높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인터넷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상시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국회에서 공론화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한미 FTA 비준 여파는 논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는 재외선거 제도나 석패율제, 지구당 부활 문제, 선거구 획정 문제 등 의원들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만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도를 보고 스스로 부끄럽다고 고백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마저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치자금법 개정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치자금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김근동 준비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 각 정당이 후보자를 선별할 때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공천의 제1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관위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1 11 28).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정치개혁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여든 야든, 좌파든 우파든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정치권의 술선수범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